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이명박 정권에서 호남이 노골적인 흘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호남사람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대단히 이기적이긴 하나 듣다 보면 그럴 법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대선에서 9%밖에 표를 주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당차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 말을 놓기자면 이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광주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 호남사람들이 20% 이상의 지지만 보내준다면 호남을 위해 뭔가 가시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정권 노골적 호남 흘대

그의 발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대통령 당선이 부동인 상황인데도 호남이 20% 이상의 지지를 해준다면 박정희 정권 이후 첫 ‘전국 대통령’으로서의 의지가 역력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리 ‘역시나’였다. 광주에서 8.5%, 전남 9.2%, 전북 9.0%를 얻는데 그쳤다.

‘네 탓’ 아닌 ‘내 탓’으로 돌리려면

에서도 이런 소외는 없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책사업을 보더라도 영남에 무려 17조 원이 집중된 반면 호남은 그 5분의 1 수준인 3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은 삽작 잘라 경상도 쪽에 돌아주는 억지도 많아지지 않았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여수에서 열린 전라선 복선철 개통식에 참석해 호남에 대한 나름의 애정(?)을 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어느 지역만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느 대통령이 호남에 몇 번을 찾는가

세히 봤는데, 정말 적게 오셨더다. (나는) 역대 대통령 중 호남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필자가 지난 4월 20일자 본보 칼럼을 통해 “대통령의 혈관엔 ‘영남 피’만이 아닌 ‘호남 피’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피가 흐려야 한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다. 당시 이 대통령의 친형인 하나님 이상득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피는 대구·경북”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느 지역만 대표하

하고 있는데야 그들 표현대로 ‘잃어버린 5년’을 맞아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지역 정치권과 민주당에 대한 ‘역할론’도 현재로선 난망이다. DJ 이후 호남권 유력 대권주자는 찾을 길이 없다. 민주당 내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분열·반목으로 리더십이 실종되고, 국회의원들의 현실 안주로 특유의 악성(野性)마저 사라졌다.

호남이 대통령 만들어야

이제, 호남이 찾아야 할 유일한 자구책이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역정치권의 변화와 수권(受權)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현재의 야권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호남민들이 호남을 차별하지 않을 대통령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과거 무명의, 경상도 사람인 노무현을 대통령 등극시키지 않았는가.

안철수 교수가 됐든, 손학규 대표든, 아니면 범야권이든 활성부문 인사라면 호남사람들이 만들자는 얘기다. 그게 아니라면 여당인사라도 20%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전략적 선택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또 다시 5년, 그 지긋지긋한 차별과 소외를 되뇌일 수는 없다. 어떤 식이든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다.

<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시설

교수들 ‘밥그릇 싸움’에 위기 몰린 광주교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대상 제외 대학으로 분류됐던 광주교대만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70% 이상이 직선제 폐지안에 반대한 것이다.

내년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뛰어든 3~4명의 교수와 그 지지자들이 기득권 때문에 직선제를 고수하는데,

교과부로서 자질과 학력이 있는 지의문이 든다. 총장 선거라는 교수들의 이기적 ‘밥그릇’ 싸움이 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험한 순간에 끌고 있다.

박남기 총장과 직원 협의회, 동문회가 “73년 역사의 대학이 현재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와의 협약 체결에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 달라”는 호소를 들리지 않는가.

교과부가 오는 18일까지 구조개혁 동참 의사를 밝혀오면 제재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차라리 대학을 떠나라.

광주경찰 기강 해이 도를 넘었다

퓨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다.

청사에서 그것도 공익근무 요원이 행패를 부린 것도 문제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감추려 했다가 감사팀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 공익근무 요원은 광주경찰청 보안협력 위원회 위원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강 확립을 입증해처럼 되뇌고 있다. 그렇지만, 돌아서면 그만이다. 이제 국민은 경찰의 맡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술판까지 벌었다.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한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친목행사는 일과 후나 휴일에 갖는 것이 상식이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공익근무 요원의 난동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8일 오전 교통안전계 소속 한 공익근무 요원이 TV 모니터와 커

경찰은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강 확립을 입증해처럼 되뇌고 있다. 그렇지만, 돌아서면 그만이다. 이제 국민은 경찰의 맡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술판까지 벌었다.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한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친목행사는 일과 후나 휴일에 갖는 것이 상식이다.

경찰의 자성과 개혁이 시급하다. 경찰을 치안의 일선답게 되돌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자칫 경찰에게 우리 사회의 치안을 맡길 수 있다는 시민적 지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無等鼓

조선시대에는 한 고을의 수령이 부임지로 나갈 때나 임기가 끝날 때 감사의 표시로 보통 그 고을에서 가장 좋은 말 여덟 마리를 바치는 것이 관행(慣行)이었다. 그런데 조선 중종 때 송호(宋鶴)이라는 사람은 새로 부임해 갈 때 오직 세 마리의 말만 받았다. 본인이 태고 갈 말 한 필과 어머니, 아내가 탈 각각 한 필씩 총 3마리였다. 당시 사람들은 송호를 삼마태수(三馬太守)라 부르며 ‘정백리’로 기렸다.

송호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 고려 충렬왕 때는 임기가 끝나는 부사에게 7필의 말을 바치는 관행이 있었는데 최석이라는 승평(승평(金之壽)) 부사는 그 7마리의 말을 아래에 받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예조 차관에게 바치려던 말이 망아지를 낳자 망아지를 포함해 모두 8마리의 말을 승평 고을 백성들에게 되돌려주었다.

이에 부민들이 최석의 뜻을 기려 비를 세웠는데 바로 팔마비(八馬碑)다. 순천은 지금도 팔마의 고장이라고 하여 청백리의 본향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관행’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병역 면제와 위장 전입은 정치인 등 사회 유력인사들이 대표적으로 저지르는 관행이다. 일부 의사들이 제약업체로부터 받는 리비트도 관행이요, 일부 은행들이 꺼기 예금을 받는 것도 관행이요, 일부 검사들이 스폰을 받는 것도 관행이다.

요즘 인철수 바립을 타고 떠나는 서

울시장 후보 박원순씨

도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입양을 했다는 의혹을 ‘관행’이라는 말로 피해가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이 저지르면 당연한 범죄행위임에도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힘 있는 이들이

라는 점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해이’와 자만심이 뿌리를 박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행’이라는 단어에 기대려는 사람들은 삼마태수 송호와 팔마비의 주인공 최석이 왜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총행기 정경부처장 redplane@kwangju.co.kr

기고

F1대회는 지역발전의 원동력



이승옥

시 개최하기 어려운데, F1은 한나라에서 7년 이상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개최국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의 서남권은 낙후의 대명사,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고 미래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는 반드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어야 한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F1대회는 전남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세계에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대회로 전남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애초 F1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됐다.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간척지인 황무지를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도산업이 필요했다. F1을 개최하여 향후 투자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주변에는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만 국내에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몇 년간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무도심은 즉시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듯이 최소한 몇 년 동안 잘 가꾸어야 한다. 가난하다고 오늘만 먹고 살자면 후손에게 물려줄 ‘먹고 살’ 기반이 없게 된다. 올해 F1대회의 좌표도 ‘절반의 성공’이 아닌 ‘대회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있을 것이다.

여수박람회를 통해 여수를 남해안 중심으로 떠나는 데에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차이를 타고 관광까지 겸하는 F1테마차를 운영되고, 순천만 생태습지공원, 보성녹차단지, 낙안민속마을, 영암 와인박사유적지, 다도해 섬 관광이 가까이에 있다.

F1대회가 유·무형의 잠재력을 무한하게 만든다.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워낙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온라인 게임 때 쓰는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10만 원 넘게 쓴 것도 충격이지만, 부모 동의도 없이 어린이들이 인터넷에서 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업체의 상술에 놀랍기 만 했다.

어린이들은 유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카드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마음 놓고 사서 살 수 있으니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다운·광주시 남구 칠석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이버머니 충전카드, 부모 동의 받고 구입토록 해야

아이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랍에서 이 상한 카드를 발견했다. 살펴보니 ‘5000원권 사이버머니 충전카드’였다. 그런데 자그마 치 10장이 넘었다.

도대체 이런 카드를 어디서, 어떻게, 왜 사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를 불잡고 다그쳤더니 그 카드로 액

면가 만큼 사이버 물품, 즉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종의 선불형 요금카드였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데 만원권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600〉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경부 2200-612 제록팀 2200-697 〈F A X 227-9500〉 디자인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시팀 2200-685 〈F A X 227-950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